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27
----------	------

2023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8. 14. 신복자 의원 외 54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8. 21.

다.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23년 9월 1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
- 그러나 신설된 규정의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만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 절차가 중복되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와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고위공직자 임명을 방지하고자 신설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무부시장·지사를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의 인사청문 대상 중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서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 1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제도 시행 근거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개정(2023.3.)되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된 ‘정무부시장·부지사’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건의안의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법률<sup>1)</sup>에 근거를 두고 인사청문회를 최초 도입하였으나, 다른 자치단체는 법령상 근거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협약 등의 방식을 통해 2011년 인천을 시작으로 대전, 경남, 서울 등의 자치단체에서 운영됨.
-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이 최근 국회에서 개정되었음(2023.3.21.).
  -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당초 개정 법안<sup>2)</sup>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법」<sup>3)</sup>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의 후보자를 청문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의결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행정 1·2부시장만 청문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됨<sup>4)</sup>.

<표-1> 행정부시장·부지사

구 분	서울시	타 시·도
정수	2명	1명 (인구 800만 이상인 경기도는 2명)
신분	정무직 국가공무원	일반직 국가공무원
직급(상당)	차관급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업무범위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명방법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3항)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의안번호 11249)

3)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4) 정무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시 행정부시장 2명만 해당하고, 다른 광역시·도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신분이며,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또한,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의 임명 절차는 시장이 제청하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의회 인사청문 도입 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국가공무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검증 절차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대상에서 서울시에만 해당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부지사’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표-2> 정무부시장·부지사**

구 분	서울시	타 시·도
정수	1명	
신분	정무직 지방공무원	별정직 지방공무원
직급(상당)	차관급	1급
업무범위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명방법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3조 제2항)	

-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임.

-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지난 3월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sup>5)</sup>.

### 3 종합 의견

-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인사청문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시에만 적용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이라는 점에서 ‘정무직·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것임.
- 당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취지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함.

---

5)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8명, 찬성 8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2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신복자, 강석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심미경,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민옥, 이병운,  
이봉준, 이숙자, 이종배,  
이종태,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55명)

##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서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음.

- 그러나 신설된 규정의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만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 절차가 중복되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한편,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와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고위공직자 임명을 방지하고자 신설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무부시장·지사를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의 인사청문 대상 중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4. 이송처

-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주민의 실질적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등의 지방의회는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미비 속에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행정 집행을 견제하며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고위 공직자, 산하 기관장 임명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으며, 정부와 국회도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의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만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 절차가 중복되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국가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부적절함이 있다.

반면,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와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으나 인사청문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고위공직자 임명을 방지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를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에서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건의한다.

2023년 8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